

수도권 민심 잡아라... 여야, '민생·주거' 공약 경쟁 가열

민주 수원, 국힘 인천서 현장 행보
與, 민생대응 위해 추경 조기처리 약속
野, '천원주택' 전국 확대 공약 검토

6·3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6일 수도권 현장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수원에서, 국민의힘은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생·주거 정책을 공약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기 수원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경기지사 선거 승리를 강조했다. 이 자리엔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후보인 김동연 지사와 추미애·한준호 의원이 참석했다.

정청래 대표는 1400만명으로 최대 인구를 지닌 경기도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잘 산다"며 "경기도에서 반드시 승리해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생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조기 처리도 약속했다. 정 대표는 "제가 현장에 갈 때마다 전통시장을 방문하는데 많이들 어려워 하시지만 이번에 긴급 편성된 추경에 대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안심하고 계신 것 같다"며 "도민 여러분께서 '역시 민주당은 위기에 강하다', '경제도 잘한다', '돈든다'고 느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못골종합시장을 방문해 김동연, 추미애,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 및 상인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오는 10일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약속드린대로 추경을 통과시켜 내수가 돌아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쟁 추경'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현장은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데 국민의힘은 말 폭탄을 쏟아내며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추경안 공격이 공천 잡음과 당내 분란을 가리기 위함이라면 그것이 바로 선거용"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와 후보들은 곧이어 수원못골 시장에 방문해 시장 상인들과 소통하는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같은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당 지도부는 인천에서 첫 지역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전세임대주택

사업인 '천원(1000원)주택'을 전국 공약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에서는 지도부를 향한 쓴소리도 나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시장에서 최고위를 열고 "인천이 인구 위기 반전을 이룬 토대는 바로 천원주택"이라며 "하루 1000원, 월 3만 원의 과격적인 임대료로 신혼부부와 무주택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준 결과, 청년 세대가 인천으로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원주택을 우리 당 전국 공약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국민의힘 지방정부를 선택하면 천원주택이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천원주택'이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처럼 현금 뿌리겠다고 달



장동혁(앞줄 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시장에서 열린 인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

려드는 것이 포퓰리즘 공약이고, 서민들의 주택 마련의 꿈 그리고 전월세 문제 이 모든 것을 제대로 풀어나기 위해 혁신적인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포퓰리즘에 중독된 민주당식 발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인천 원도심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주택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으로 주거 격차를 해소하도록 하겠다"며 "반값 전세 도입, 초저금리 대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주거비 절감형 정책을 통해서 서민 부담을 직접 낮추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날 최고위에 참석한 인천지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은 당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5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은 "인천 선거에서 이기면 전

국 선거에서 이긴다. 인천 선거에서 지면 전국 선거에서 진다. 정치권의 통설"이라며 "수도권 민심은 빙하기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도부가 뭔가 결단을 해달라"며 "후보자들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당 중앙이 혁신하는 비상 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병규 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은 "선당후사"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좀 바빠야 하지 않나 싶다. '선민후당'이라고 생각한다"며 "길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이 '제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고 말한다. 우리는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고, 당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갈등과 싸우기만 한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박경수·김보민

인천기자 syj@metroseoul.co.kr



민주당, 개헌안 내달 7일 본회의 의결 전망

국민의힘 제외 6개 정당 공동 발의
정원오 의혹 제기한 김재섭 제소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헌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5월 7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오늘 국무회의에서 (개헌안 공고안) 의결해서 20일 동안 공고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6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

개 정당이 지난 3일 공동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 도입 및 국회 계엄해

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강화 ▲지역 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이 담겼다.

아울러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정원오 의혹'을 제기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당에서 정원오 후보 관련 허위사실(공포포) 고발했는데 원내에서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원오(전) 구청장은 2023년 한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칸쿤으로 해외 출장을 갔다"며 "출장 서류에 여직원 이름이 '남성'으로 등재돼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박경수 인천기자 gws0325@

'노동절'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 된다

공무원·교사 등 전 국민 휴일

5월1일 노동절이 과거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이 되면서,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

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졌으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서예진 기자

특히 법률 제정 이후 현재까지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은 휴일이 보장되지 않아 민간·공공부문 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공휴일 지정을 통해 온 국민이 함께 노동의 가치를 기념할 수 있게 됐다"며 "노동절이 공무원에게 재충전의 기회가 돼 국민의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활력 있는 공직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靑 "호르무즈 지원·선박 연계 검토 안해"

외교부도 "사실과 다르다"

청와대는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과와 관련해 이란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고, 우리 선박을 빼 오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외교부 역시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구호품 제공과 선박 통과는 연계하는 방안은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적 지원에 대한 검토는 중동지역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정부는 국제규범 등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내 모든 선박에 대한 자유로운 항행과 안전보장, 글로벌에너지 공급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

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입장 아래 관련국들과 소통·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이 대통령이 지난주 청와대 참모와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비공개 특별대책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국적 선박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외교부도 이날 대변인실 명의로 관련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면서 청와대와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최근 일본과 프랑스 등 외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잇달아 통과한 상황에서 해협 통항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란과의 통항 관련 직접 협상보다 주요국들과의 다자적 틀 내에서 선박 안전 및 항행 보장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예진 기자

與,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에 김정호

안호연 의원 6·3 지선 출마로 공석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경남 김해)이 6일 신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에 내정됐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의

상임위원장 인선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자당 소속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사임의 건을 처리한 뒤 보궐선거 안건을 통해 김의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박경수 인천기자